

문재인 정부 100일

개혁이 불충분하거나

(노동, 건강보험, 핵발전소 등)

숫제 시도하지도 않는다

(한미 관계)

우리는 이보다 나은 개혁을

바랄 자격이 있다



동아시아 불안정
부채질하는
트럼프

4~5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공동대표
인터뷰

3면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여성과 《자본론》

6~8면

독일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독일 식
노사관계 모델

11면

미국 백인 극우들의
폭력 시위
트럼프 등장의 산물

5면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지 마라

12면

문재인의
건강보험
개편안

9면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 공격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활동 보장돼야

전주현

성평등 교육에 앞장서 온 초등학교 교사들이 우익들로부터 ‘페미니즘을 빙자한 여성 우월주의자’로 낙인 찍혀 공격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명 일베)를 비롯한 일부 우익들은 최현희 교사(서울위례별초등학교)가 교사 동아리 모임 ‘페미니즘 북클럽’을 소개한 인터뷰 영상을 문제 삼아 ‘신상 털기’와 ‘사이버 인신 공격’ 등으로 해당 교사들을 괴롭혔다.

이들은 최현희 교사의 교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성소수자 지지 포스터와 배지 사진을 유포하며 ‘남성 혐오자들이 아이들을 동성애로 물들인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또한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교사는 자질이 없다’며 해당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거나 학교에 전화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페미니즘 북클럽’ 교사들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에 맞서 대안적 성평등 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교사들이다. 이 교사들은 페미니즘 서적을 읽고 토론하며 성차별에 도전하고 인권 교육을 실천해 왔다.

수수방관

최현희 교사는 대안적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성차별과 성역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사회에서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교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학교 역시 아이들을 성별화하고 억압하는 사회의 일부가 되고 만다.

“교사의 젠더 감수성은 성평등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페미니즘으로 본 학교”, 《진보교육》 6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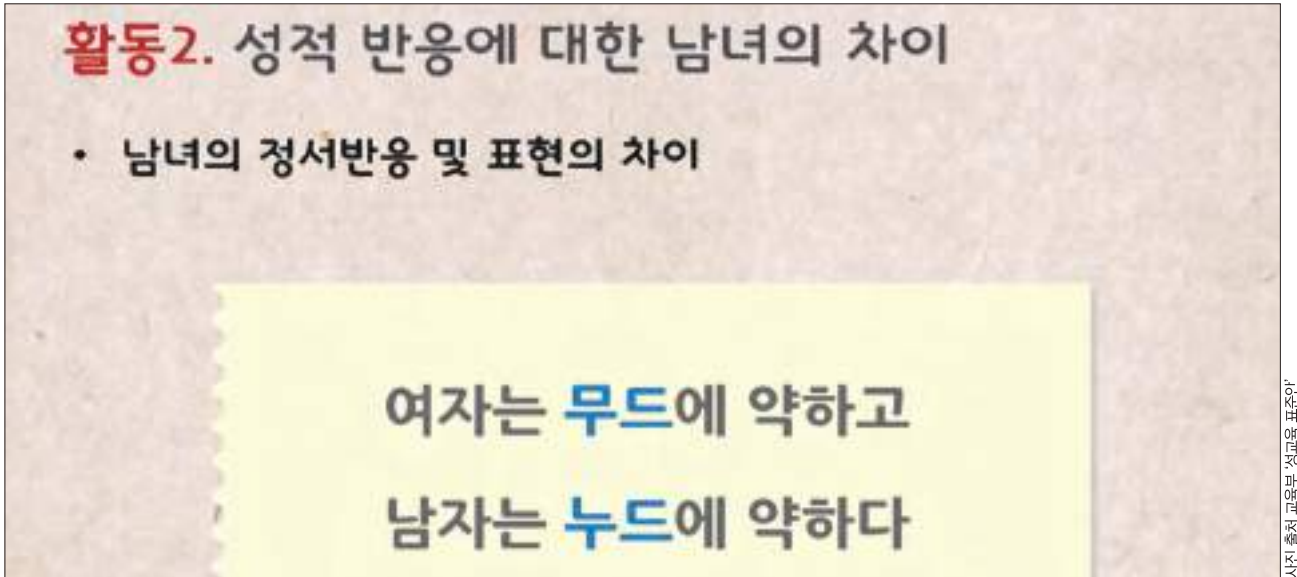
“학교가 이(성차별과 성역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학교 역시 아이들을 성별화하고 억압하는 사회의 일부가 되고 만다.”(최현희 교사)

그래서 ‘페미니즘 북클럽’ 교사들은 ‘성차별적 언어 사용하지 않기’, ‘교과서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기’, ‘성별이나 나이로 차별하지 않기’,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 향상시키기’ 등을 실천하며 “성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으로서의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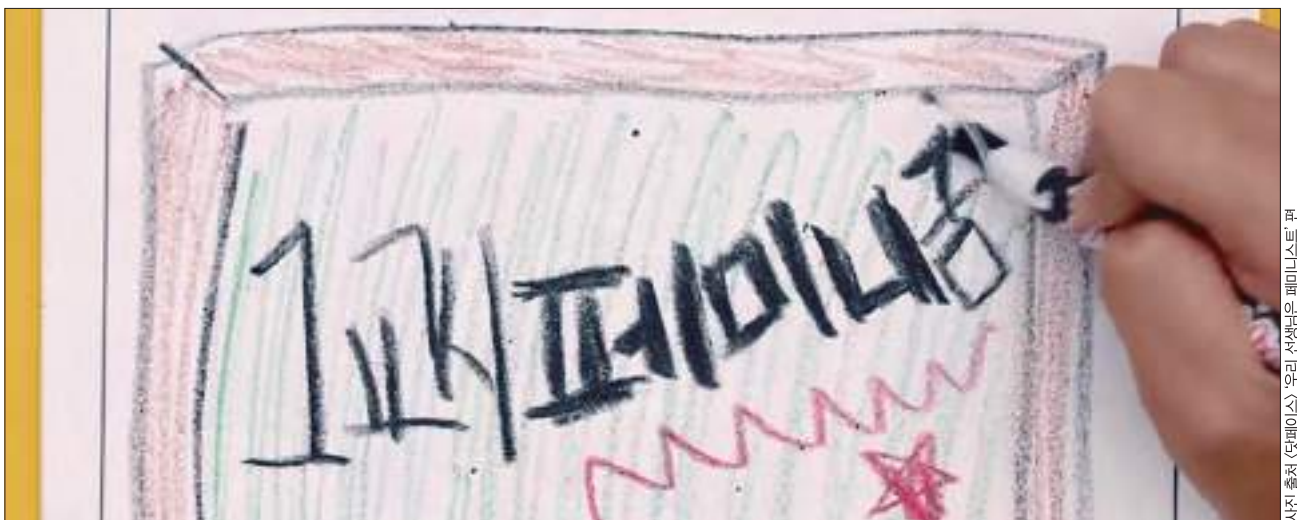
그러나 해당 교육지원청은 성차별적 우익들의 공격으로부터 교사들을 방어하기는커녕 ‘수업에서 페미니즘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교사들을 문제 삼았다. 애초 ‘페미니즘 북클럽’을 지원한 서울시교육청은 수수방관하다 전교조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위례별초등학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평등교육 지향”을 위해 선정한 ‘서울형 혁신학교’이다. 따라서 “조희연 교육감이 교사들의 공부 활동을 권장하고 지지를 표명”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사들의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했다.(《경향신문》 8월 13일치 ‘페미니즘 북클럽’ 교사 인터뷰)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직장 대응으로 피해가 커진 교사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성차별에 도전하며 학교를 ‘혁신’하려는 교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간곡동 영평초, 남영초(서울 강서구)



표준기(매곡초), 조은(신원초), 서종민(서울 강서구)

왜곡된 성인식 부추기는 정부의 ‘성교육 표준안’(위)은 괜찮고, 페미니즘 교육(아래)은 안 되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기존의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완전히 빠져 있고,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따위의 내용으로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것이어서,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단체

들과 전교조 등 교육 단체들이 폐기를 요구해 왔다.(관련기사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라’, 본지 196호)

왜곡된 성인식과 성별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기존 ‘성교육 표준안’은 마땅히 당장 폐기돼야 하고, 제대로 된 성교육안이 마련돼야 한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햄버거병’ —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질병
- ★ [기아차] 식당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형태 개악 철회하라
- ★ 문재인은 제주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세계 난민 지난해 역대 최대치 기록

매정하고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

차승일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16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세계 난민은 6천5백6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1천30만 명이 새로 난민이 됐다. 1분에 20명씩 생긴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세계 난민의 절반이 18세 이하 아동이라는 점이다. 그중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7만 5천 명이나 된다.

수년째 내전과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리아 출신 난민이 1천2백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콜롬비아(7백70만 명), 아프가니스탄(4백70만 명), 이라크(4백20만 명), 남수단(3백30만 명), 수단(2백90만 명), 콩고민주공화국(2백90만 명), 소말리아(2백60만 명), 나이지리아(2백50만

명), 우크라이나(2백10만 명), 예멘(2백10만 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지역들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앞장서 퍼뜨린 신자유주의 정책과 외채라는 굴레, 미국·유럽·러시아 등이 벌인 제국주의 침략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의 개입 때문에 더 격화된 내전을 겪는 곳들이다. 즉, 세계 난민은 잔혹한 제국주의의 희생자들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난민 사태에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국은 약 27만 명, 독일은 약 67만 명, 영국은 약 12만 명, 프랑스는 약 30만 명, 이탈리아는 약 15만 명, 러시아는 약 23만 명을 난민으로 인정해 받아들였다. 다 합쳐도 약 1백74만 명으로, 전체 난민의 2.7퍼센트도 안 된다. 경제 규모가 세계 92위밖에 안 되는 우간다가 94만 명을 받아들였다. 선진국들이 우간다보다도 인색한 것

이다. ‘국제사회 노력 박차’ 운운하는 것이 참으로 낮 뜨겁다.

그러므로 강대국들이 비용을 핑계로 대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강대국들은 전쟁과 무기에 쓰는 돈을 더 늘리며 잠재적으로 난민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방예산을 5백40억 달러(약 61조 원) 증액했다. 그러나 미국의 2017년 유엔난민기금 공여액은 약 9억 달러(약 1조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요새화된 유럽’(Fortress Europe)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난민 유입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수천 명이 지중해에 빠져 죽는다.

난민 발생의 최대 책임자들인 강대국들은 난민을 위해 국경을 개방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도 세계적 난민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며 파병했다. 미국과 서방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다. 아직도 레바논에 파병돼 있는 동명부대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을 가로막는 이스라엘을 사실상 거두고 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난민 신청은 7천5백42건이다. 그중 98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률이 0.8퍼센트에 불과한 것이다. 이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져 왔다.

한국의 난민 수용은 대폭 확대돼야 한다. 난민들은 한국 정부도 동참한 제국주의 전쟁이 낳은 피해자들이다.

Q 용어설명

유엔난민기구는 자발적이지 않은 이주인을 강제이주민(forcibly displaced)이라고 부른다. 강제이주민에는 난민(Refugee),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비호/난민지위 신청자(Asylum-seeker)가 있다. 이 글에서는 강제이주인을 모두 난민으로 통칭했다.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국내실향민, 비호/난민지위 신청자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난민 인정,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에 시달리는 자로 출신국 밖에 있으며,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 유엔난민기구는 출신국 밖에 있으면서 심각하고 무차별적인 생명의 위협, 일반화된 폭력으로 인한 자유와 신체적 위협 혹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들의 이유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도 보호 대상으로 간주한다.

★ 국내실향민 집이나 통상적인 거주지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들.

★ 비호/난민지위 신청자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개인.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박혜성 공동대표 인터뷰 “기간제·예비·정교사가 단결해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해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를 소개하면?

성과급 차별 등 기간제 교사 차별에 맞서 활동하다 2016년 3월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만들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기간제 교사 두 명이 사망했지만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현실이 우리가 활동에 나서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 전기련은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 기간제 교사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출발해 현재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전기련의 입장과 최근의 활동을 소개해 달라.

기간제 교사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 연수 대상 제외, 호봉 승급 시기 제한 같은 차별을 겪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말했을 때, 기간제 교사들은 당연히 우리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환 대상에서 배제돼 분노가 상당하다.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았으니 정교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은 교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교육 현장에서 같고 닮으며 얻은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능력이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에게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우리를 배제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모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항의하기 어려워하던 기간제 교사들이 최근에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하기 시작했다. 불이익을 걱정해 가면을 쓰고 나오지만, 그렇게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집회에 못 오는 회원들은 응원 메시지와 후원금을 보내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소수다. 우리 목소리를 더 많이 알리려면 더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조직되고 함께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우리의 주장에 조금

이라도 귀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전기련에 가입해 함께 하자고 적극 호소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회원이 두 배로 늘었다.

지지와 연대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전교조 활동가, 일부 교사, 비정규직 운동 단체들, 노동 변호사,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등이 연대해 주는 것에 큰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연대를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전교조 일꾼연수에 찾아가 연대를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분위기가 느껴지다 기사를 참조하시오.)

정부와 일부 언론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가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이해와 충돌한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정규직화 요구와 예비 교사들의 이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는 여전히 교사가 부족하다. 교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노랑진 입시 학원이 아니다. 교사를 대폭 확충해 더 많은 예비 교사들이 교사가 되고, 우리도 정규직이 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이롭다.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을 안고 사는 조건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하기는 쉽지 않다. 안정적인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간제를 정규직화해서 기간제 교사 제도가 없어지면 예비 교사들에게도 정교사가 되는 길이 더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예비 교사, 임용고사 준비생들도 우리와 함께 정부에 더 많은 정교사를 확충하라고 요구하기를 바란다.

전교조 등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교사를 필요만큼 뽑지 않았고, 그나마도 적지 않은 수를 기간제로 채웠다. 그 결과 지금도 현장에 교사는 부족하고 정교사들은 노동강도 강화에, 기간제 교사들은 차별에 시달린다.

따라서 교사, 기간제 교사, 예비 교사들이 함께 단결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교육부가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기구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애초에 정부가 배제하지 않았으면 됐을 일이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니, 전환심의위원회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전환심의위원회에 모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전기련은 계속 우리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8월 26일 집중 집회가 예정돼 있고 지역별 전기련 모임 등을 시작하고 있다.

인터뷰·정리 이정원

전교조 전국일꾼연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지지 분위기가 느껴지다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8월 11~12일에 열린 전교조 전국일꾼연수(일꾼연수)에서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이 진지하게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강사들과 기간제 교사들이 항의 행동에 나서고, 교육부가 전교조에게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 상황과 맞물려 전교조 안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점이 급부상한 때에 일꾼연수가 개최됐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일꾼연수 장소에 찾아와 리플릿을 나눠 주고 정규직화 지지 서명을 받았다. 전기련 공동대표인 박혜성 교사는 기간제 교사들의 투

쟁에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의 주장은 참가자들에 큰 감동을 줬다.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투쟁할 때,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의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그러지 못한다. 기간제 교사 집회를 할 때도 계약이 안 될까 봐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한다. 이제 막 기간제 교사들이 용기 내서 투쟁을 시작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지해 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 변화는 투쟁으로 만들어진다. 촛불로 박근혜를 몰아낼 때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실득

전교조 집행부가 비정규직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도 부정적인 입장임이 전교조 안팎에서 확인되던 상황에

서, 전기련 교사들의 활동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비정규직 운동 안에서는 정규직의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예단해 정규직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회피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이다.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정반대로 전교조 일꾼연수에 찾아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규 교사들과 토론했다. 이런 활동이 일꾼연수 참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지 않던 정규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뒤 마음을 바꿔 서명했다. 전체 참가자 2백여 명 중에 67명이 서명했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지부장들도 서명했다.

전기련 서명 부스에 찾아와 질문하고 토론하는 정규 교사들의 모습도 자

주 볼 수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자기 동료들에게 서명을 받겠다며 리플릿을 받아가기도 했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도 전기련의 요구와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기간제 교사들과 함께 서명을 받았다. 또, 《학교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 쟁점과 대안》이라는 소책자를 발행해 동료 교사들과 토론하는 데 활용했다.(70권 정도가 판매됐다.)

일꾼연수 참가자들의 분위기는 애초 예상을 뛰어넘었다. 온라인과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과 현장에서 만난 전교조 일꾼들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다. 전자가 현실의 정서를 (대체적으로라도) 대변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절감했다.

한 참가자는 “토론을 할수록 조합원들이 조금씩 왼쪽으로, 원칙적 지지 입장으로 당겨 오는 분위기”라고 현장 상

황을 요약했다.

둘째 날 있었던 전체 토론은 일꾼들의 분위기를 요약적으로 보여 줬다. 일부 발언자는 정규직화를 반대하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다수는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화를 지지했다.(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성급하게 입장을 결정하기보다는 조합원들과 더 많은 토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이번 일꾼연수는, 언론들이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전교조 내에서 비정규직 교사·강사, 특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지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뜻 깊은 자리였다.

얼마 후에 열릴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런 분위기를 받아 안아 전교조가 계급적 단결 원칙을 견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트럼프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하지 말라

김영익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은 전략 폭격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꺾 포위 사격을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현재의 한반도 긴장 상황이 즉시 전쟁 개전으로 나아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 불안정의 근저에는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 악화가 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질 때, 공교롭게도 인도와 중국이 국경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치하기 시작했다. 1962년에 전쟁까지 치렀을 만큼 국경 문제는 양측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인도는 중국이 인도양으로 확장하는 것을 경계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하고 파키스탄 과다르 항을 확보한 데 이어, 아프리카 지부티에 처음으로 해외 군사기지를 세우는 등 인도양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와 인도양 등지에서 ‘골목대장’ 구실을 하고 싶은 인도의 이해



트럼프·문재인은 이 와중에 전쟁 연습을 강행하려 한다 지난해 열린 을지프린트가디언 훈련

관계와 충돌한다.

중국의 지리적·군사적 확장에 대한 인도의 경계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접점을 이룬다. 최근 인도가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부쩍 발전시킨 배경이다. 미국과 인도는 남중국해에서 합동으로 해군 초계 활동을 하기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트럼프 정부는 인도에 무

인 경찰기 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무인 경찰기는 인도양에서 중국 해군 활동을 감시하는 데 쓰일 것이다.

같은 6월에 중국과 인도는 국경에서 대치하기 시작했고, 7월 미국·일본·인도는 인도양에서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여기에, 상시 분쟁 사안으로 고착

된 남중국해 분쟁이 있다. 6월 베트남의 남중국해 자원 탐사를 중국이 군사 위협으로 막았다. 그 후 베트남은 8월 국방장관이 포함된 대규모 방미단을 보내어 미국과의 방위협력 강화에 나섰다. 그래서 내년 미국 항공모함이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영국 정부가 “항행의 자유”를 위해 신형 항공모함 2척을 남중국해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남중국해 분쟁은 앞으로도 악화될 듯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통상법 301조(징벌관세 부과 등 무역보복)를 휘두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미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중이다.

이런 갈등들과의 관계 속에서 최근의 한반도 긴장을 봐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중국 견제의 파트너로 끌어들이려고 애썼다. 특히 미·일 동맹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호주와,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남한과 각각 관계를 강화하고 동맹을 구축하고 공고히 하려고 했다.

이런 흐름은 트럼프 집권 후에도 변함 없었고,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다방면으로 강화해 오고 있었다. 올해 히말라야, 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모두에서 긴장이 높아진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이다.

“화염과 분노”가 키운 한반도 긴장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천명해 왔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중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취임 직후부터 그는 북한·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4월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 북핵 문제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하는 데 관심이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金正은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후 봄 내내 북한은 잇달아 여러 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데 자극을 받아, 북한도 적극 대응했던 듯하다.

하지만 이 와중에 북·미 접촉도 진행됐다. ‘트랙2 대화’(비정부 인사들의 대화) 시도가 있었고, 정부 간 비공식 접촉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와 북한이 서로 북핵 문제에 관한 의사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 접촉의 성과는 거의 없었던 듯하다.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도 주재 북한 대사 계춘영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과 남한이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도 가능함을 내비쳤다. 북한이 공식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문재인은 북한의 제안을 일축해 버렸다. 한·미 연합훈

련 중단은 없다고 못 박았고, 미국은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그리고 북한은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공세와 특히 대북 압박이 불러온 반발인 셈이다.

이런 상황은 그간 동아시아에서 갈등이 누적된 결과이며, 북핵 문제의 ‘판돈’도 커졌음을 보여 준다. 대북 압박 강화에 북한이 계속 반발한 결과, 북한 핵무기 능력이 점차 강화돼 이제 장거리 핵타격을 공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칫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남한 지배자들이 독자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이는 미국 지배자들로서는 답갈지 않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일차적 대응은 대북 압박의 강도를 다시 높이는 것이었다. 유엔에서 북한산 석탄, 철광석 등 지하자원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트럼프는 매우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단지 북한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물론 이런 언사는 더한층 긴장을 높였고,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런 언사가 한반도에서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물론 긴장 국면이 바뀔 여지는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중재로 대화가 가능한지를 조심스레 타진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일부 지배자들도 북한 핵무장 능력이 계속 강화되니 일단 ‘핵동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는 게 좋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미국과 북한이 공식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 중에도 계속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또한 중국 등 다른 열강과의 관계가 어찌 되느냐에 따라 미국은 언제든 판을 엮을 수 있다. 현 긴장 상황이 진정되고 잠시 평화의 막간극이 올 수는 있으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한반도 주변 열강의 갈등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후 유엔에서는 전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제재 강화에 동의해 줬다. 중국과 러시아도 제국주의적 국가들이자 핵무기 강국들로서 핵무기 독점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북한 같은 중간 규모의 산업국이 이 위계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경계한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엇갈린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골치

가 아프고, 북한과 큰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심각한 불안정에 빠지거나 붕괴되는 상황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완충 지대인 북한이 붕괴한다면, 중국은 커다란 안보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긴장이 극대화하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 영토(괌)를 선제 공격한다면 중국은 북한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킬 테지만, 만약 미국과 남한이 군사 공격으로 북한 정권 전복

을 시도하고 한반도 정치 판도를 바꾸려 한다면 중국은 이를 막을 것이다.”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로서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올해 초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러시아는 북한 화성-14형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점은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경계한 것과 관련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국주의 국가들로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면도 있으나, 미국이 북핵 문제를 이용해 동아시아에서 군사 행동과 동맹 강화에 나서는 것은 경계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시험을 동시에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라고 요구한다.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서 중국 책임을 계속 부각시키며 중국을 향해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인도와 국경 분쟁 중인 중국으로선 동쪽에서 미국이 압박해 들어오는 상황이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이제는 무역과 군사에 집중하겠다”며 북핵 문제를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와도 연계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는 트럼프의 지시와 북핵 문제가 교차하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커질 공산이 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열강의 갈등은 제국주의 진영 대반제 진영의 대립이 아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각기 다른 이해

▶ 5면으로 이어짐

미국 백인 극우들의 폭력 시위

트럼프가 부른 유혈사태

알리스터 패로우

8월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살러츠빌에서 나치인 제임스 필즈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돌진해 활동가 1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했다.

그의 차에 치어 숨진 헤더 D 헤이어는 백인 민족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에 맞서는 맞불 집회에 참가하던 중이었다.

극우들은 이 지역에 있는 로버트 E리(남북전쟁 당시 남부군 장군)의 동상이 철거되는 것에 반대해 모여 있었다. 동상 철거는 시의회가 결정한 것이었다.

이번 비극이 벌어진 이후 미국 전역 약 7백 곳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사망한 활동가를 기리는 집회가 열렸다.

뉴욕에서는 수백 명이 트럼프 타워를 향해 행진했다.

[미국 남부] 뉴멕시코에 사는 다닐라 러몰드는 이렇게 전했다. “이번 폭력과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항의해 인종과 연령, 피부색이 다양한 약 3백 명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는 1백 명이 모였다. 이 지역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브리지오 사쏜은 이렇게 전했다. “우리는 살러츠빌 등 미국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대하고자 모였습니다.”

한편, 가해자 필즈가 ‘아메리카 전위대’라는 나치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우익이여 단결하라” 행사에 참가한 사진이 공개됐다. ‘아메리카 전위대’ 웹사이트는 “백인 미국인들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파시즘이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 파위의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다.

필즈를 가르쳤던 한 교사는 그가 학창 시절 제2차세계대전에서 나치 친위대가 한 일을 찬양하는 글을 써냈다고도 전했다.

그 자신이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도널드 트럼프는 폭력 사태에 “여러 편”이 가담했다며 유혈사태가 발생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이번 공격을 비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백인 민족주의자들의 폭력 시위를 비난하



사진 출처: Rodney Dunning(블리커)

트럼프에게 이 비극의 책임이 있다

길 회피다가 공화당 다수파한테서도 고립됐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는 지독하게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였고, 미국 전역의 인종차별주의자들과 나치들은 이를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트럼프는 지지층을 붙잡아 두려고 인종차별적 연사를 내뱉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공화당을 달래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그의 지지층도, 공화당도 모두 만족하지 않고 있다.

기업인 3명이 항의의 뜻으로 트럼프의 자문위원단에서 사임했다. 한편, 전 KKK 지도자 데이비드 듀크는 트럼프에게 “거울을 똑바로 보면서 당신을 뽑은 사람들이 백인 미국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다그쳤다.

8월 12일은 극우들이 전국적으로 동원해 시위를 벌인 날이었다. 이날 시위 참가를 독려한 우파단체들은 매우 다양했고 나치도 포함돼 있었다.

나치 웹사이트인 ‘데일리 스톰머’[‘돌격대 신문’이라는 뜻]는 다음과 같이 지

지자들에게 촉구했다. “데일리 스톰머 책 읽기 모임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날 행사에 참가자를 동원해야 한다.”

또 다른 나치 단체인 “국가사회주의 운동”(NSM)은 “모든 NSM 단원은 살러츠빌로 결집하라”고 동원령을 내렸다.

그동안 미국 남부 도시들에서는 남부군 인사들의 동상과 상징들이 철거돼 왔는데, 극우들은 수 개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여 왔다. 7월에도 KKK는 살러츠빌에서 행진을 벌이려 했으나 맞불 시위대 수백 명에 저지당한 바 있다.

[미국 남부 주요 도시인] 뉴올리언스와 세인트루이스 등지에서도 극우와 그에 맞서는 집회들이 작은 규모로 벌어져 왔다.

트럼프의 부상으로 극우가 자신감을 얻고 있지만, 인종차별 반대 운동도 그에 맞서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 왔다. 극우에 맞서 행동을 건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극우 부상의 이면

극우의 살러츠빌 시위와 공격은 미국에서 나치와 극우 단체들의 성장이 위협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우익이여 단결하라”는 기치 아래에 이날 시위가 조직됐다.

지난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하자 나치 웹사이트 ‘데일리 스톰머’의 필진 앤드류 앵글린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께서 성스러운 황제로 등극하셨다”고 썼다.

“대안 우파”의 깃발 아래에는 나치임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단체부터 연성 인종차별 단체까지 다양한 세력이 모여 있다. 남부빈곤법률센터가 집계한 미국 내 “증오 단체”는 9백17개에 이른다.

8월 12일 시위는 ‘미국을 위한 단결과 안보’라는 단체의 제이슨 케슬러가 조직했다.

극우 세력이 자신감을 키우고 갈수록 더 큰 규모로 시위를 벌이면서 매우 강

경한 나치 중핵이 부상하고 있다. 8월 12일 시위에서는 덜 강경한 우파 세력은 떨어져 나갔고 그 결과 그 중핵이 드러났다.

한 기자는 극우 시위를 취재하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국가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고 상당수가 그렇다고 답했다. [나치의 공식 명칭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주류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도 되겠다고 판단한 많은 나치 조직들(‘국가사회주의운동’ 등)은 로고와 상징들을 바꾸고 있다.

반파시스트 활동가들은 그들이 나치임을 폭로하고, 그들이 트럼프 당선과 그의 역겨운 말들을 이용해 여느 정치 세력처럼 보이게 하려는 짓을 막아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67호 / 번역 김종환

▶ 4면에서 이어짐

문재인의 ‘베를린 구상’, 시험대에 오르다

관계를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국가들 간의 갈등이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과 경쟁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래에 한반도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자본주의 열강들에게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촉구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구하는 격이다. 그보다는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 건설이 중요한 전략적 방향으로 제기돼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동결을 시작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위한 대화와는 별개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다.

문재인의 이런 제안은 ‘베를린 구상’의 연장선 위에 있다. 7월 베를린에서 문재인은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의 포괄적 접근, 남북 경제협력 복원,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과 정치·군사적

상황의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서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공세 강화와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남한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의 단초를 찾기가 힘든 것이다.

핵동결

문재인은 대북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 6월 “올바른 여건 하에서”만 대화를 하기

로 미국과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핵동결을 하면 북핵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8월 하순에 진행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인 울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대북 공격 위협이 포함된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북한에 핵동결부터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북한 측에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은 여전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한 방위력의 토대 위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다. 여

기서 모순과 한계가 발생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춰 주고, 강한 방위력을 위해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포함한 막대한 군비 증강을 준비하면서, 과연 [북한이] 핵 없이도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돌파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노동자 운동은 자신의 독자적인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강령을 추구해야 한다.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여성과 《자본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자, 신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책갈피〕}의 저자 실라 맥그리거가 방한 해 맑시즘2017에서 했던 연설을 녹취한 것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김종호 기자

지난 몇 년 사이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참가한 독일의 한 학술대회 이름은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궤적’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계급 문제’(178호)] 비슷한 시기에 헤더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는 《마르크스와 젠더, 가족》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또, 리즈 보겔이라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가 쓴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이 최근 재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1983년에 처음 나왔던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의 많은 페미니스트 모임들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1960~70년대의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마르크스와 여성차별 문제의 관계에 대해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오해가 ‘마르크스는 여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본론》 1권 등의 저작을 볼 때, 마르크스는 여성차별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거나 빅토리아 시대 남성의 전형적인 [여성차별적] 태도를 보여 줬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둘째 오해는 마르크스가 여성차별을 다루면서 순전히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자본주의 하 여성차별의 기원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잘못된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여성은 노동계급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오직 노동계급 남성의 아내라는 구실만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여성이 노동자이기도 한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통계를 공유하겠습니다. 전 세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52퍼센트로 올랐습니다. 반면 남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같은 기간 81퍼센트에서 77퍼센트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는 30퍼센트이고, 남아시아에서는 40퍼센트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오늘날 60퍼센트입니다. 카리브해 지역과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는 50퍼센트가 못 됩니다.

영국에서 1971년에서 2011년 사이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9퍼센트에서 74퍼센트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남성은 92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즉, 여성은 더는 “산업예비군”이 아닙니다. 노동인구의 구조적 일부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도 여성이 28.7퍼센트로, 남성(23.4퍼센트)보다 더 높습니다. [여성 고용이 공공부문에서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독일에서는, 2002~12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5.3퍼센트에서 71.6퍼센트로 증가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체 노동인구의 50퍼센트 정도가 여성입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의료 노동자의 80퍼센트 정도, 가정용품과 가전제품을 만드는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중국에서는 2013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44퍼센트가 여성입니다. 농촌에서 상경한 농민공 노동자들의 60퍼센트도 여성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의료 노동자가 4백만 명인데, 그중 90퍼센트가 여성입니다. 의료 생산은 방글라데시 수출의 76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여성의 16퍼센트가 바스티(Bastee)라고 불리는 군대 막사 비슷한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스티는 허술하게 지어졌습니다. 2013년 4월 [의료 공장이 밀집된] 라나 플라자가 붕괴해 수많은 사상자가 났던 사건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마르크스가 오늘날 살아 돌아온다면, 당연히 자신이 살던 시대에 견뎌 달랐던 것이 많다고 느낄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혀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집필할 당시의 많은 모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예컨대 농촌의 노동인구가 대거 대공장으로 유입되는 현상, 그에 따라 성매매와 가사 도우미 규모가 커져간 현상 등은 모두 그가 《자본론》 1권에서 묘사하고 분석한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동역학이 미치는 영향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것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어디서

생겨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노동력 착취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체제의 기본 동력이 축적 자체를 위한 축적임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제의 핵심에 경쟁이 있고 이 경쟁 때문에 체제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 세계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축적 과정이 기계류 도입, 생산과정 혁신, 신제품을 내놓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바꾸고 결국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어디서 일하느냐는 결국 축적 동역학과 자본의 필요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의료 부문에서 많이 일하는 반면, 영국 여성들은 지방정부, 의료, 교육 부문에 밀집돼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축적 압력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다른 결과를 야기하고 그 결과 여성이 일하는 부문이 달라진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동시에 여성들은 노동력 재생산이 개별 가정에게 떠맡겨진 상황에서 그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를 중심으로 자신의 노동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영국 여성들은 출산 이후 시간제 일자리를 얻는 경향이 있고, 한국 여성들은 일을 중단하는 식이죠.

물론 이 패턴조차 영국과 한국 모두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출산 이후 더 일찍 업무에 복귀하고 더 오래 일하는 경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중요하게 지적한 한 가지는, 자본 축적의 경쟁 본성 때문에 경제 위기가 굉장히 핵심적 구실을 한다는 것이 많다고 느낄 것입니다. 단적으로 지난 20~30년 동안 신자유주의 변화의 배후에 있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윤을 하락을 만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임금을 더 낮추고,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고, 여러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최근의 금융 위기 이후로는 긴축 재정을 강요하는 것 등은 엄청난 변화를 낳았는데 단적으로 빈곤이 크게 늘었습니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긴축을 밀어붙이며 복지 국가를 공격했는데 이 모든 일은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된 부담을 여성에게 한층 더 떠넘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지배계급은 이윤율을 만회하려고 하면서 노동계급 전체에게 부담을 떠넘기지만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어디서 비롯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보조급 삭감, 주거지원급 삭감,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을 낳는 긴축 정책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노동자로서 노동 현장에서 착취율이 커지고 휴식 시간이 더 짧아지고 노동 시간은 길어지고 업무 목표치 압박이 커지고 더 엄격한 규율을 부과받는 동시에, 가장 내 부담도 긴축 정책의 효과로 더욱 커지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자본론》 1권을 읽고 또 나아가서 2권, 3권까지 읽어볼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급으로서 여성의 힘

《자본론》을 읽어야 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둘 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으로 정취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맥락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도 “노예의 사슬은 바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1인터내셔널[1864~1876]과 제2인터내셔널[1889~1916] 등 초창기부터 여성이 사회적 생산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주장했는데요, 19세기에는 여성의 생산 참여가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며 논쟁을 벌여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이를 중요하게 주장한 것은, 여성이 사회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 해방될 거라고 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힘을 갖도록, 즉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진 끔찍한 투쟁들을 보십시오. 영국에서는 공공부문과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이 크게 벌어졌고, 최근에는 런던에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파



《자본론》에서는 여성차별과 가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볼 수 있다

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의 압도 다수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2011년 혁명 당시 타흐리르 광장에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나란히 용감하게 싸웠을 뿐 아니라, 혁명을 예비했던 [2006~07년] 섬유 노동자 파업에서도 여성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거리로 나서면서 구호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남자들 다 어디 갔냐! 남자들 나와라!” 왜냐하면 당시 남성 노동자들은 집에 있었는데, 자신들이 시작한 점거 파업에 합류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촉발된 파업은 10개월 동안 전국 20만 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리고 이집트의 보건 부문과 교육 부문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들과 대등하게 아주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확률은 남성 노동자들이 파업할 확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방글라데시의 5개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11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는데, 전체 1천6백 명 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 1천3백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여성들이 혁명적 과정, 즉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과정에서 중심적 구실을 한다는 마르크스의 분석이 옳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자본론》의 분석을 보면, 마르크스는 젠더 감수성이 없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분석한 상품, 상품 생산, 자본주의의 착취 분석 등의 개념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은 놈이든 아들이든,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불자든, 그들이 모두 노동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윤이 생겨나는 과정(착취 과정)은 그런 차이들을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가 자신이 탐구하던 노동계급, 특히 잉글랜드 노동계급이 남성·여성·아동으로 나뉘어 있고,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노동자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본론》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지배계급이 남성 노동력을 값싸게 대체하려고 기계 도입과 함께 여성과 아동 노동력을 사용한 방식을 분석한 것이고, 이 분석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노동계급 재생산과 양육

지금부터 저는 《자본론》이 제기하는 네 가지 정점을 다루겠습니다. 첫째는 노동계급의 재생산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바를, 둘째로는 자본주의 발전이 가장 내 일들에 미친 영향을, 셋째로는 자본주의 발전이 노동계급 가족에 끼친 영향을, 넷째로는 여성과 노동계급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말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계급의 재생산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계급의 재생산 문제라 함은, 노동자들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음날 다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자는 등 재충전하는 문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 그리고 [나이 들어 더 일하지 않게 됐을 때] 살아가는 문제를 말합니다.

마르크스의 핵심 개념은 노동가치론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노동력의 비용, 즉 임금은 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죠. 예컨대 주 40시간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임금이 실제로는 그 40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가비를 감당하고 먹고 마시고 옷을 구입하는 등 우리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기초한 것이고, 40시간에 대한 대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실제 임금이 [40시간이 아니라] 10시간 동안 노동한 몫밖에 주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본가가 이윤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먹고, 어떤 옷을 입는지 등에 대해서 그리 많은 얘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이 점을 들어 마르크스를 비판합니다.

더욱이 《자본론》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나오는데, 분명 환원론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노동자계급의 유지와 재생산은 언제나 자본의 재생산에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이 조건의 충족을 노동자의 자기 유지 본능과 생식 본능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자본론》 1권 제23장, 이하 인용문 출처는 정만표기]

이 말만 놓고 보면 노동자들은 단지 생물학적 욕구에 좌우되는 존재인 양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 과정을 분석하던 맥락이었음을 떠올리면 그가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고 재생산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 알 바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치합니다. 자본가계급이 오직 관심 갖는 것은 개별 노동자들의 소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꺾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경쟁의 결과입니다. 자본가계급은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로 나앉은 열악한 주택에서 살다가 화재가 나 불타 죽든, 정말이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듯한 과정인데요, 마르크스는 자본가계급이 경쟁이라는 쳇바퀴를 돌리면서 우리의 몫을 빼앗고 또 빼앗는다고, 우

▶ 8면으로 이어짐



세계적으로 가전용품을 만드는 노동자들 다수가 여성이다. 사진은 중국 여성 노동자들

사진 출처 Robert Seaborn (클립아트)

▶ 7면에서 이어짐

리의 저항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계속 빼앗는다고 설명합니다.

더욱이, 《자본론》 1권을 읽다 보면 마르크스가 노동자들의 재생산과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군데군데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마르크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의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마르크스는 임금에 대해 말하면서 “[다른 상품과 달리] 역사적, 도덕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제6장). 다시 말해, 임금은 한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앞서 쟁취한 것과,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따라서 임금은 단지 혈뺏고 굴주리는 것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예컨대 신문을 구독하고, 문화적 생활을 즐기고, 교육을 받는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시 그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수준과 계급투쟁 결과에 의해 정해집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노동계급 전체로 봤을 때 그들이 받는 임금에는 ‘아직 노동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아동)이나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구성원(노인)을 위한 생존 수단을 포함한다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제6장]

그는 또한 남성 성인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 아이들까지 공장 체제로 빨려 들어가고 그 결과 남녀, 어린아이까지 모두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가장인 남성 한 사람만 돈을 버는 것보다 노동계급 전체로 봤을 때 착취율을 높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가족 안에서 여성이, 자기나 아이가 먹을 몫을 줄이면서까지 남성에게 음식을 더 많이 주고 그래서 그가 다음날 일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이 벌어오는 임금이 없으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둘째로 저는 자본주의 동역학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에도 어떻게 침투하는지 마르크스가 분석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자본가를 위한 강제노동은 아이들의 놀이 시간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유노동까지도 일부 빼앗았다.”[제15장]

마르크스는 자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몹시 즐겼던 만큼, 5살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아동들은 집에서 놀 시간이 없다는 것을 결코 보아 넘기지 않았습니

다. 그는 또한 가사노동이 상품화되는 과정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바느질과 옷수선 같은 기존의 가내 노동을 대체하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예견했고 오늘날 그가 옳았음이 입증된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성(물론 남성도 적용되지만 특히 여성)이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그 가족은 가정 바깥에서 더 많은 물건을 사야 하고 이를 위해 상점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또한 경제 위기의 효과에 대해 쓰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도 했습니다. 당시 경제 위기는 주기적으로 찾아왔고 면직물 산업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런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일감이 사라진] 여성 노동자들이 이전에는 일하느라 못했던 모유 수유를 한 다거나, (공장 감독관 보고서를 인용하며) 요리하는 법을 배운다고 썼습니다.

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가정에 끼친 영향을 얘기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통찰도 보였습니다. 당시 의무교육이 처음 도입됐는데 많은 부모들이 반발했습니다. “애가 돈을 벌어야지, 학교에는 뭐 하러 가냐” 하면서 아이의 등교를 막고 공장으로 끌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마르크스의 기본 논지는, 타할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공장으로 끌고 가는 장본인은 분명 그 부모이지만 부모들로 하여금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자본주의 체제를 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또한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끼친 해악,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고, 그것이 출산과 양육에 영향을 끼치며, 공장 노동자들의 영양실조와 사망률에 영향을 준다고 기록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처럼 공장 제도가 남녀 노동자와 아이들에 끼치는 온갖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인용구는 제가 전체를 인용을 하겠는데 중요한 인용구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종래 가족제도의 붕괴가 아무리 끔찍하고 메스껍게 보일지라도, 대공업은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가정 영역 바깥에서 여성, 미성년자, 남녀 아동에게 맡김으로써 더 고차원적 형태의 가족, 더 고차원적인 남녀 관계가 가능해질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또한 노동자 집단은 이처럼 남녀 모두를 포괄하고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과 맞물린다면, 이 사실이 인간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명백하다.”[제15장]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노동계급 가족을 지탱할 물질적 토대가 사라졌다고 본 것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사회 변화와 계급투쟁

그럼에도 마르크스가 1867년에 《자본론》을 출판한 지 1백50년이 지나서 후기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보면, 마르크스가 예견한 대로 여성이 노동력의 핵심적 일부가 된 것이 여성에게 모종의 ‘힘’을 부여했고 여성의 사회적 구실을 바꾸는 동력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백50년 전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이런 통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여성 해방이나 완전한 평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전보다 더 많은 평등을 바라고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여기



이윤율을 높이려는 자본가들의 공격에 여성은 노동자로서,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중으로 고통 받는다

고, 많은 남성들도 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자라나는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보다 자기가 더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학생들도 남학생들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또, 세대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조부모와 손자·손녀의 관계가 예전처럼 위계적이지 않습니다. 세대를 가로질러, 그리고 같은 세대 안에서도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평등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마르크스가 노동력 재생산 방법으로 묘사한 현상 중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사장들은 런던의 고아들을 영국 북부에 있는 공장으로 끌고 가 막사 같은 곳에 수용하면서 일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마르크스가 여성과 노동계급에 대해서 한 얘기를 살펴 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당시 공장 감독관들과 공중보건의들이 공장에서 관찰하고 보고한 것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르주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의 행동을 굉장히 도덕주의적으로 비난하는 논조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이라도 되는 양 술에 취한다든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얘기를 썼는데, 마르크스는 딱히 비판하는 논평 없이 그런 말들을 인용합니다.

그럼에도 마르크스는 공장 내에서 남녀 간에 또 성인과 아동 간에 어떻게 노동 분업이 이뤄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요, 예컨대 남성이 작동하는 기계, 여성이 작동하는 기계, 아동들이 작동하는 기계들 사이의 연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투쟁이 처음에는 아동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이후에는 여성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벌어진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남성 노동과 여성 노동과 아동 노동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성 노동자의 노동시간

도 단축시키는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 봤고 당시 노동조합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실크 산업을 위해 아동들의 교육이 어떻게 희생됐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남겼습니다. 비단을 짜는 일에는 손가락이 작고 야무아동들이 성인보다 더 능숙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됐고 노동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또한 여성의 행동이 전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게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남녀가 함께 일할 때 복장도 똑같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도 똑같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또한 아이들이 엄마를 낯설게 여기는 현상에도 주목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자기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도저히 없었고 그 결과 아이들이 자기 엄마한테 몹시 적대적이기 일쑤였습니다. 동시에 엄마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른바 ‘모성 본능’이라는 것은 발휘되지 않았고 엄마는 노동하느라 아이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엄마와 아동을 모두 서로 낯선 타인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또한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들이 성매매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요컨대 저는 여러분께 《자본론》을 한번 읽어 보라고 권합니다. (혼자 읽기보

다는 여럿이서 함께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착취 과정이 단지 남성뿐 아니라 여성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굉장한 통찰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축적 과정은 남과 여, 그리고 어린이가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을 단지 노동력으로 환원시켜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들의 주거와 보건 상태나 복리는 어떤지, 이 체제는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나아가 마르크스는 착취 과정에서 노동자들 간에 성별 차이, 나이 차이, 숙련도 차이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그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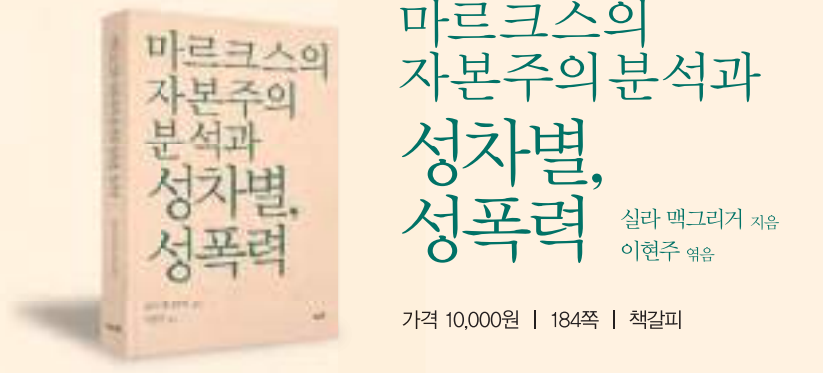
또한 착취 과정이 다시 성별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론》은 이런 착취 과정에 맞서는 데서 계급투쟁이 얼마나 핵심적인지 보여 줍니다. 자본주의는 살아 있는 노동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에는 “때로는 공공연하게 때로는 은밀하게”(〈공산당 선언〉) 계급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은밀하든 공공연하든 바로 그 계급투쟁에서 오늘날 여성들은 핵심 세력이고, 다수 남성들과 같은 편에 서 있습니다.

본지 웹사이트 전문 기사에는 청중토론 후 실라 맥그리거의 정리 발언도 실려 있습니다. 동역 천경록, 녹취 박충범

필자의 책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약간의 개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란한 빈 수레

장호중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의 극히 일부는 실질적인 개선을 느낄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조치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가깝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현재 63.2퍼센트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높이는 것이다.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0퍼센트, 전체로도 80퍼센트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겨레〉 등이 이를 두고 “비급여 전면 건강보험 적용”이라며 부풀려 보도한 것은 한심한 일이다.

물론 이조차 약속대로 된다면 개선이기는 하다.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것이다.

먼저,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한다지만 이는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지금도 법적으로 ‘필수적인’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비급여가 이토록 많은 것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약국 등)이 대부분 민간 소유인 상황과 연관이 있다. 민간 의료기관들은 자신의 수익이 진료비에서 나오니 값비싼 재료와 약물, 치료법을 선호한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정부)은 의료비 지출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정부는 이런 구조가 효율성을 높인다고 선전해 왔지만, 실제로는 이윤 논리와 관료주의가 대중의 필요를 대체해 왔을 뿐이다. 그 결과 민간 의료기관이나 정부 모두 일정 영역을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키려는 경향을 낳았다.

예컨대 수액 주사를 맞을 때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주사바늘은 일선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값싼 금속 바늘을 써도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고 병원 측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 바늘을 갖다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이 멍청한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사례는 넘쳐난다. 제약, 의료기기, 용품 등 의료 연관 기업 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품은 원가를 줄이는 방향으로(즉,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비급여는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쪽 모두에서 최대 수익을 올리려 한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영국 국가의료체계(NHS) 같은 방식으로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민간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 한국, 멕시코가 늘 OECD 꼴찌를 차지하는 이유다.

게다가 정부는 비급여를 없애기 위해 5년 동안 30조 원가량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이는 누적해서 부풀려진 액수다. 실제로는 내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 2019년에는 9천 6백58억 원, 2020년 6천9백15억 원, 2021년 6천3백5억 원, 2022년 5천9백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요란한 빈 수레 호들갑을 뒤로 하고 들여다 보면 보장성, 자원 마련 등에서 함정이 많다

2015년 현재 건강보험 급여 지출 규모가 45조 7천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증가율은 5퍼센트도 안 되는 셈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비급여 항목이 곧바로 급여로 전환되기보다 일부만 보장하는 것으로 남을 듯하다. 문재인은 이런 경우들을 “예비급여”로 분류해 보험 적용 비율을 차등화(10~50퍼센트) 하기로 했다. 또 3~5년 뒤 보험적용 지속 여부를 재평가하겠다고 한다. 정확히 말해 ‘모두’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보험 적용인 셈이다.

예비급여

입원 환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간병비, 병실료)도 짚끔 생색내는 수준인데다 실제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선택진료비는 박근혜 정부조차 이미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환자들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데다 이를 성과급과 연동하

는 병원 측의 임금 정책에 노동조합들이 문제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폐지했음은 미지수지만 촛불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이 이를 새로운 계획처럼 내놓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간병 부담을 줄이려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확대한다지만 “충분히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데, 열악한 노동조건과 이에 비해 낮은 임금 탓에 지금도 많은 간호사들이 몇 년 만에 일을 그만두는 형편이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고 있다. 한쪽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문제를 만들어 내는 식이니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1~3인실 병실료의 경우 환자 “쏠림” 현상을 막는다며 최대 50퍼센트까지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약제도 전액 보장이 아니라 30~90퍼

센트까지 차등을 둔다. 치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지만 치매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정도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 돌봄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중증’ 치매의 경우에만 욕창 치료 등 진료비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물론 그조차 앞서 지적했듯이 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급여의 폭은 계속 달라질 것이다.

개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일부 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 대책인데, 그조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장기 입원자는 별도 심사제도를 두겠다는 두고 볼 일이다.

서비스비·규제프리존법

자원 마련 방법도 기만적이다. “보험료 인상은 과거 10년간 통상 보험료 인상을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보험료가 동결되거나 1퍼센트 남짓 인상된 기억을 이용하려는 못된 꼼수일 뿐이다. 2007년 보험료 인상은 무려 6.5퍼센트였고 2008년에도 6.4퍼센트나 올랐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4.9퍼센트, 5.9퍼센트 인상됐다. 지난 5년간 실질임금 인상률이 1.34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 평균치(2.9퍼센트)만 돼도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삭빠르게도 “OECD 수준으로의 급격한 개선보다, 부담가능한 보험료 인상을 고려한 계획”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또, 정부는 매년 4월마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따져 1년치 보험료 추가분을 징수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보험료 수입의 14퍼센트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 지원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지난 10여 년 동안 5조 3천억 원가량 덜 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를 수익성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여겨 온 전임 정부들과 근본적으로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의료 민영화법으로 지적돼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다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그 정도로 이 법이 끼칠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 포장지만 바꾼 의료 민영화’, 본지 212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신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안전 규제도 완화하려 하는 등 박근혜 ‘적폐’를 이름만 바꿔 이어받는 모양새도 보인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극의 공범이었던 박기영을 최근 과학기술 혁신 본부장 임명하려 한 시도도 그 일환인 듯하다. 사실 이명박근혜 시절 새누리당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한 일이라고 꼬집었을 때 민주당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요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이 노동자들에게 그저 이익이 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이나 의료 ‘산업’ 자본가들의 이익을 사회에 알아서 재분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약속은 지키지도 못할 것이고 그 책임을 상대적으로 나은 처지에 있는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좌파는 노동자들에게 문재인을 믿고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임금 등 자신들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근본에서 의료를 수익성 높은 산업으로 여긴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쏟아지는 철근

세월호, 탄생부터 참사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얽혀 있다

김승주

인양된 세월호의 화물칸에서 철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8월 6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철근은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톤씩 발견돼, 열흘 만에 1백 12톤을 넘었다.

2016년 6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일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여 톤이 실렸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후에도 화물칸에서는 철근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청해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참사 당일 실린 것들은 1백 퍼센트 해군기지로 가는 것” 이었다고 밝혔다(〈미디어 오늘〉 2016년 6월 16일자). 승객 5천명 무게에 해당하는 철근의 양은 일반 화물 총량의 3분의 1 이상으로,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게다가 규정을 어긴 채 대충 고박됐다.

철근을 비롯한 화물의 과적과 부실한 고박은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배가 한 번 왼쪽으로 기울어졌고, 그 탓에 배가 견잡을 수 없이 전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화물의 쓸림은 급격한 침몰을 야기해, 탈출 가능 시간을 대폭 감축시켰다.

그런데 참사 당일 무리한 출항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늦어지고 있던 상황과 연관이 깊다는 의혹도 제기돼 진상 규명의 과제로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참사 직후 검찰이 철근의 양을 2백8십여 톤이라고 축소 발표하고,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로 들어간 철근의 조달 경로를 숨긴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의 축소·은폐 의혹도 커졌다.

앞으로 철근 과적, 부실한 고박, 축소 보고 등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

야 한다.

특조위가 분석한 청해진해운의 영업 실적 자료를 보면, 청해진해운은 2010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며 대비하고 있었다. 실제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된 2012년,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주요 건설자재 화물량이 급격히 상승해 2013년에는 이전의 갑절 가까이 폭증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차질이 생긴 상황도 발견됐다.

청해진해운은 경쟁 선사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일본에서 사온 낚은 배를 급하게 개조하고, 허위계약서를 꾸미고, 선박 허가 기관에 뇌물을 뿌렸다. 즉, 세월호는 탄생부터 제주 해군기지와 연관돼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가 화물을 꾸역꾸역 싣고 휘청거리며 항해하는 동안, 이명박과 박근혜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짓밟으며 해군기지 공사를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천혜의 자연 환경이 파괴됐고, 주민들의 삶도 물리적 폭력과 벌금 폭탄과 온갖 이간질로 파괴됐다.

이미 강정 마을과 세월호에서 끔찍한 희생을 만들어 낸 제주 해군기지는, 장차 더 큰 위험과 불안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내몰 미국 제국주의, 그리고 한미 동맹과 연관돼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오바마 정부 때부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을 재천명하고자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제서열의 맨 꼭대기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며 중국을 견제하려고 애썼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려는 미국



사진 출처: 청정원, 4.16 가족협의회

“안보” 내세운 해군기지 건설이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빼앗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발견된 철근들

의 전략에 비춰볼 때, 제주도는 동·남중국해와 서해, 일본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자 미사일 방어 체계(MD)를 구

축하려 하는데 제주 해군기지는 MD의 중요한 일부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성주 주민들을 짓밟고 배치를 강행하는 사드 또한 MD의 핵심 무기다.

“정부 차원 재조사” 약속을 저버린 문재인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세월호 3주기 추모식에서 “국회 동의를 없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부 차원의) 특조위를 재가동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당선 후 그 약속은 강제력이 없는 ‘자문 기구’ 성격으로 바

뀌었고, 급기야 8월 16일에는 그마저도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그리고 문재인은 정부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겼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 2백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잘 될 것으

로 믿는다.” 하고 말했다.

쌀쌀맞기 이를 데 없는 박근혜와는 달리, 문재인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지만 세월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임자와의 구분선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이윤 위해 안전 내팽개친 기아차 사측

노후 설비 교체하고 고소·고발 철회하라

기아차 화성공장 조립 1부 노동자들이 노후 설비 교체와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여름휴가 직후인 8월 7일 조립 1부 하체반에서 생겨난 안전 결함이었다. 자동차 하체 조립라인의 가드레일에 17곳이나 금이 가 틈이 생긴 것이다(크랙 발생). 가드레일은 작업자들 위로 지나가는 차량들의 무게(2톤이 넘는다!)를 지탱하는 구실을 하는데, 그곳에 생긴 크랙을 방지하면 자칫 큰 인명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조립 1부 하체반에서는 근래 수 차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사측이 노후 설비 교체와 안전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발견된 사측 문건을 보면, 지난달에 조립 1부에서만 무려

63곳에 크랙·불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7일에도 곳곳에서 크랙이 발견됐지만, 사측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땀을 흘렸다’며 열령땀땀 생산을 지속하려 했다. 대의원·산업안전위원들이 라인을 중지시키고 항의하자, 부서장은 그제서야 “추석 전에 가드레일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사측의 태도가 돌변해 배짱을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9일에는 해당 선거구 대의원 이명환 동지와 산업안전위원 임국빈, 박영근 동지를 고소·고발하기까지 했다.

이에 조립 1부 노동자들은 △전 공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노후 설비 교체,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항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1~3공장

의 조립부서 대의원들은 8월 18일로 예정된 기아차지부 대의원 회의에서 화성 공장 차원의 파업 등 투쟁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다.

모두를 위한 투쟁

사측은 돈벌이에 혈안이 돼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다. 고소·고발은 활동가들을 표적 삼아 안전을 위한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아비한 술수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00년대 초 현장 파업 등을 벌여 작업중지권을 따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이것이 흔들렸다.

사측은 2004년에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우선 라인부터 가동한다는 ‘안전사고 처리규정’을 강요했고, 우파 집행부가 여기에 합의해 버렸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해 이듬해에 이 합의가 폐기됐다. 개악을 주도했던 사측 관리자 송교만은 슬로바키아 공장으로 쫓겨났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사측은 현장 통제와 작업중지권 공격을 강화했다. 현대·기아차 공장 곳곳에서 탄압이 이어졌고, 2010년에는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가 다시 ‘선 라인 가동’을 담은 개악에 합의해 버렸다. 나중에 노동자들의 반발로 개정됐지만,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후퇴까지 막지는 못했다.

올해 판매 축소로 고전하고 있는

사측은 다시금 안전을 위한 투쟁을 공격하고 나섰다. 2004년 작업중지권 개악을 시도했던 송교만이 다시 화성공장에 지원실장으로 복귀해 이번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이번 투쟁은 단지 조립 1부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성지회 집행부는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 방어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동안 작업중지권이 약해진 데에는 집행부가 그 투쟁을 해당 부서만의 문제로 방치했던 것이 주요했다.

무엇보다 기아차의 현장 활동가들이 발 벗고 나서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안전을 위한 투쟁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조합원

독일 사회주의자에게 듣는다

독일식 노사관계 모델: 누구를 위한 성공의 역사인가?



독일의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에서 활동하는 폴카트 모슬러가 본지의 요청으로 독일 노사관계에 대한 글을 보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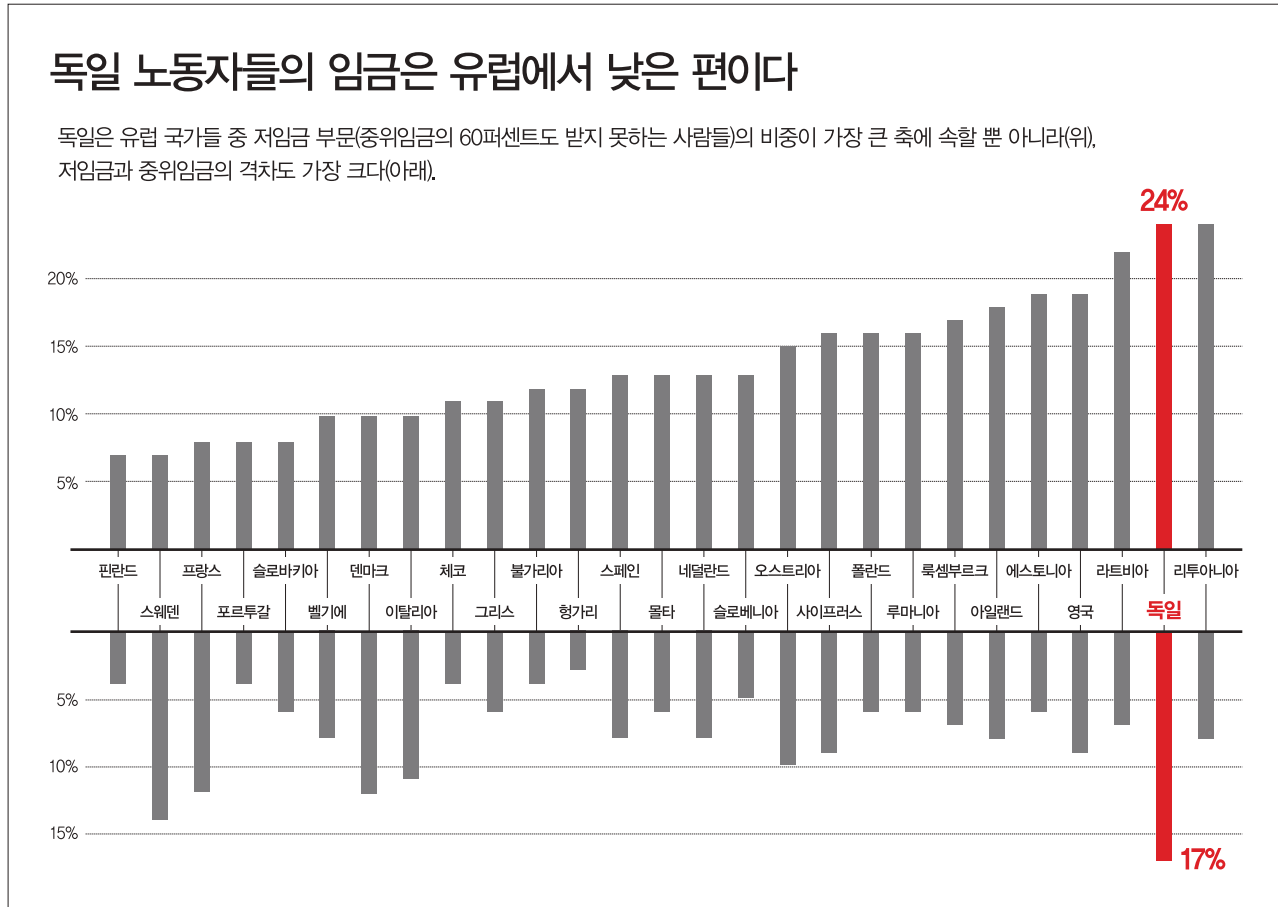
흔히들 독일의 노사관계가 경제 성공의 열쇠라고 한다. 정말로 그런가?

2009~16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1.8퍼센트로 유로존 평균 1퍼센트보다 조금 높았다. 실업률은 6퍼센트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 보면 문제가 드러난다. 바로 총 노동시간이 늘지 않은 것이다. 파트타임과 비정규직이 늘고 평균 실질임금이 2000년 수준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2000~16년 독일의 노동비용은 프랑스 등 유로존보다 10퍼센트 낮았다. 지금 독일 경제가 매우 미약하나마 활황을 보이는 것은 자본들끼리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 수출을 늘려 경상수지가 8퍼센트 흑자를 기록한 덕분이다. 이 때문에 유로존 내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실질 실업률은 여전히 높지만 감춰져 있다. 임금은 떨어졌다. 수출은 늘었다. 다시 말해 독일 경제의 "성공"은 자본가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노동자 입장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또 다른 사례, 디젤 자동차 파문을 보자. 디젤차의 배출가스 수치를 체계적으로 조작한 대



형 사기극에 독일 자동차 기업(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포르쉐)이 모두 공모했음이 드러났다. 이 기업들 모두에는 [감독]이사회가 있고,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절반가량을 노동조합과 사업장평의회(이하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이 사기극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였고 그 막강하다는 금속노조도 그랬다. 오히려 노조 대표자들은 공세적으로 환경 보호 정책 반대 로비를 벌였다.

독일식 노사관계는 정확히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생겨났는가?

피고용인이 2천 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각각 절

반씩 참여해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의장은 사용자 측이 임명한다. 감독이사회에서 노사가 동수로 맞설 경우, 의장이 2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 2008년 기준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6백 94곳이다. 피고용인이 5백~2천 명인 기업의 경우, 노동자 측 대표자들은 감독이사회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

노동조합들은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19세기 전반기[독일 산업화 초기] 때와 같은 참혹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동결정"제도의 진상을 알려면 독일 노사관계의 역사를 보는 것

이 좋다.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 제국은 대규모 제조업 기업들에 서의 노사 갈등을 규제하려고 중재위원회를 꾸렸고 그 과정에서 최초로 노조를 인정했다. 산업쟁의가 거세고 잠재적으로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던 상황에서 독일 국가는 노사관계를 안정화시켜 줄 세력을 조직 노동계급 안에서 찾았다. 1918~19년 노동자·병사평의회 운동이 군사적으로 패배한 후, 1920년에 20인 이상의 모든 기업과 작업장에서 사업장평의회(Betriebsräte)를 선출하도록 한 사업장평의회법이 도입됐다. 사업장평의회는 회사의 안정을 위해 경영에 협조해야 했고 '산업평화 수호 의무'(Friedenspflicht) 탓에

파업을 할 수 없었다.

나치 집권기에, 그 뒤에는 연합군의 점령기에, 노동조합과 사업장평의회는 처참하게 파괴됐다. 그 뒤 루르 지역의 석탄·철강 기업들의 옛 자본가들은 노조가 감독이사회(이하)의 절반을 차지하게 해 줬다. 이 자본가들은 패전 이후 승전국들에 의해 자기 회사가 해체되거나 작은 규모로 쪼개지거나 심지어 폐업될까 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나치에 맞서 싸운 노조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것이 독일식 노사관계의 기원이다. 이후 수립된 서독 국가는 그러한 구조를 다른 중규모, 대규모 기업들로 확대했다.

이렇듯 제1차세계대전 와중에,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자본 측이 취약하고 노동계급 측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덕분에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가 생겨난 것이다. 이런 동반자 관계는 자본의 이익을 지키고, 각각 혁명과 패전에서 자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산업 투쟁과 파업이 많았던 시기에 상근 간부들로 구성된 이른바 노동계 대표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거둬 방어하고 나섰다.

이후 노조 조합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1990년대까지 노동계급 다수에게 모종의 보호막을 제공했던 노사 합의는 오늘날에는 노동자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한다. 오늘날 독일 전체 노동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저임금 부문에 해당되는데, 이는 [유럽 나라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사회적 동반자 관계가 제도화된 것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 노동계급이 투쟁에 나설 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

번역 김종환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지지율 역대급 급락, 왜?

지난달 문재인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뉼 마크롱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정치혁명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촛불혁명이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프랑스·한국의 대통령이 됐으니 공통점이 많다."

마크롱은 파키스탄계 영국 좌파 저술가 타리크 알리가 "극단적 중도파"라고 부른 정치 성향에 딱 어울리는 인물이다.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당의 우파와 중도우파 공화당 일부의 지지를 받으며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마크롱의 신당 '진전하는 공화국당'이 5월 대선에 이어 6월 총선에서도 승리한 것, 기성정당들의 지지율이 폭락하며 수십 년 된 양당 구도가 깨진 것 등을 보면, 한국판 "극단적 중도파"인 문재인이 "공통점이 많다"고 한 것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없지 않다.



노동자 투쟁 예고로 "힘든 9월"을 앞두고 있는 마크롱

국민의당 이언주도 지난달 '마크롱 현상: 한국 정치발전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언주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두고 "미친 놈들",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하는가" 하고 비난하며 여성과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노동을 노골적으로 천대하고 무시해 못매를 맞았던 자다.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이언주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개혁

을 목표로 해야 정치교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름대로 주류 양당 사이에 낀 자당의 신세를 투영해 마크롱의 선거 승리에서 희망을 찾는 것일 게다.

그러나 올해 프랑스의 대선과 총선은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기권표와 무효표도 많았다. 이를 고려하면 마크롱은 프랑스 전체 유권자의 약 15퍼센트의 지지만을 받았을 뿐이다.

또, 선거 전후의 상황을 넓게 보면 프랑스 정치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양극화의 압력 속에 있다. 나치 정당인 국민전선과 급진좌파 정당인 '불굴의 프랑스'의 성장이 그것을 보여 준다. 정치 양극화의 배경에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장기적 경제 침체가 있다. 그러므로 정치 양극화의 압력도 그만큼 지속될 것이다.

그 속에서 마크롱은 좌도 우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좌우 모두의 공격을 받으며 크게 약해질 수 있다. 이 점을 보며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소속의 사회주의자 바니나 주디첼리는 "마크롱은 역대 가장 약한 대통령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니나 다를까, 마크롱은 집권한 지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7월 말 국정 수행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36~54퍼센트로,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하락세는 분명하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 취임 초 지지율이 이렇게 급

락한 경우는 1995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때 15퍼센트포인트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자신도 연루된 비리 추문, 국방예산 감축에 반발한 합참의장의 사임, 긴급재정으로 공격이 예고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연금 생활자들의 불만, 즉 좌와 우 모두의 반발이 그 요인으로 거론된다.

게다가 공산당 친화적 노총인 노동총동맹(CGT)은 물론 사회당 친화적 노총인 민주노동자총연맹(CFDT)도 9월에 노동개악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급진좌파 '불굴의 프랑스'의 대표 장클렘 뮐랑송도 "휴가철이 지나면 노동개혁 반대 등을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마크롱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의당이 마크롱의 승리를 환영한 것은 유감이다.)

마크롱에게 힘든 9월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승일



조선조 기사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임준형

최근 잇따라 이주노동자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8월 6일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깨서브 스레스터(Keshav Shresth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은 한국에 온 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27살 청년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그는 유서에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네팔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고 싶는데 안 된다는 내용을 남겼다. 바로 다음 날 충남 홍성의 돼지 축산 농장에서 일하던 25살의 네팔 노동자 다빅 싱(Dipak Singh)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저는 이제 없습니다. 저를 누군가 데리고 갑시다. 꿈이 많았으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생전에 주변 동료들에게 농장이 휴가도 안 주고 사업장 변경도 안 해 준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어 벌어진 비극적 사건들로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의 동의가 있

어야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며 그조차 3년 동안 3회로 횟수가 제한돼 있다. 2012년에는 제도를 더욱 개악해 사업장을 변경할 때조차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직접 고르지 못하고 사업주들의 선택을 기다리도록 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신고를 사업주가 노동청에 하면 이주노동자는 미등록으로 전락하고 본국으로 쫓겨난다. 사업주는 이를 이용해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거나 이주노동자에게 앙갚음을 하곤 한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는 최대한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매우 열악한 처지로 내몰고,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니샤(26세, 여성) 씨도 이런 고용허가제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그는 고용주가 애초 약속과 달리 축산농장에 붙어 있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심지어 화장을 하고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라고도 강요했다. 고용주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해고해 버리고 20일이 넘도록 사업장 변경을 허락해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전화로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이탈 신고 하겠다”하고 협박했다고 한다. 니샤 씨는 “이 나라에 돈을 벌러 왔지만 나는 노예가 아니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억울한 죽음과 피해만 당하는 것은 아니다. 열악한 처지를 딛고서 그들은 스스로 조직하며 저항을 이어 왔다. 억울한 죽음과 사연들을 알리고 있고, 고용허가제 등 악법의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도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노예 노동을 강제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어쩌다가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을 해 주면 이주노동자들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기뻐한다. 사업주는 내가 선물해 줬으니 고마워하라고 한다. [당연한 권리여야 할] 사업장 변경이 선물이 되고 있다. “우리가 불쌍하니가 이런 제도를 잘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당한 노동자이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이렇게 죽어 가고 사업장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 말로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뿐 아니라 계속해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반드시 우리 요구를 들어야 한다.” 이주노조 등 이주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등 연대하는 한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행동도 계획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13년(고용허가제를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에 즈음해 8월 20일 서울 보신각에서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가 열린다. 고용허가제 폐지가 주요 요구이며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함께 모여 집회를 하고 도심 행진도 할 예정이다. 8월 14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도 열렸다. 니샤 씨와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도 참석해 발언했다. 이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이 주최했다. 경찰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이 집회 금지 구역이라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팻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구호를 외칠 때마다 경고 방송을 하며 방해했다. 얼마 전 문재인이 기업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호프미팅’을 한 것과 대비됐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은 노동계급 전체 이익의 증진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의 폐지를 요구하자. 이주노동자들의 8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를 지지하자. 전국에서 모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뜨겁게 연대하자.

함께 참가합시다!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전국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8월 20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서울 종로 보신각 (집회 후 세종문화회관까지 행진)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동대위,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이주공동대위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례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50,000원 | ☐ 2년 100,000원 |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